

노동자 삶과 지역사회 위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올해 12월부터 연달아 문을 닫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된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전국의 61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2038년까지 37기를 폐쇄하고 24기만 남겨 가동합니다. 충남은 전국 최대의 석탄화력발전소 밀집지역으로 현재 29기 중 2038년까지 22기를 폐쇄합니다.

발전소 같은 시설이 문을 닫게 되면 노동자의 실업 문제와 지역 상인 등 주민들의 생계 피해가 불 보듯 뻔합니다. 현 상황에서 발전소 폐쇄 이후의 대책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발전소 노동자들과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 뜻을 함께 하는 시민들이 충남 태안과 경남 창원으로 행진을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일터의 폐쇄에 동의한 노동자들

■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통해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비롯한 악질적인 원하청 구조가 드러났고, 발전소 인근의 주민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암 발생률과 발전산업이 기후 위기에 미치는 악영향도 공론화가 되었습니다.

발전소 노동자들은 노동환경 개선과 정규직화를 위해 오랫동안 싸워왔습니다. 동시에 발전소 노동자들은 자신이 평생 피땀을 쏟은 일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청소할 때마다 나오는 ‘슬러지’ (sludge 전기를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석탄을 태우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와 온몸을 뒤덮었던 ‘석탄가루’가 노동자에게도, 지역 주민에게도, 지구의 미래에도 해롭다면 폐쇄하는 것이 옳다는 발전소 노동자들의 엄청난 결단이 있었습니다.

■ 발전소 노동자들은 대안으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합니다. 석탄발전소가 폐쇄되는 지역에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여 기후위기와 고용위기, 지역경제위기를 막자는 것입니다.

공공에너지 확대와 고용 보장, 정부가 나서야

■ 한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문제점은 대부분 민영화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풍력발전소의 경우 사업허가의 93%가 민간사업자 소유이고 그중 외국자본 비중은 66%입니다. 민영화된 해상풍력 발전소는 공공이 운영하는 것에 비해 1GW당 연간 1,920억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2050년 100GW의 해상풍력 발전소가 운영되면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연간 약 20조원에 이르는 차이가 납니다. 그 비용만큼 전기요금 이 오르고 국가 재정이 새어 나갑니다. 민간기업이 독식하는 이익은 그대로 국민들의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꼴입니다.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지역주민, 노동조합이 함께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는 경로가 필수입니다. 노동자와 지역사회 모두가 소외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과정이 중요합니다.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을 개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협동조합과 협력하여 대안에너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기후와 고용은 모두의 문제, 금속노동자가 함께 하자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당연한 과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발전소 노동자들의 일터가 사라지는 것이 기후를 위해 희생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하거나 부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와 고용 문제는 특정 지역과 업종을 넘어 멀지 않은 미래에 모든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닥쳐올 문제입니다. 때문에 민간제조업 노동자들도 공공부문 발전소 노동자의 투쟁에 주목해야 합니다. 국가와 정부에서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게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강제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충남지역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발전소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5월 31일 태안으로 모입니다. 📍

